

망언 3인방 ‘꼼수 징계’ 하더니 “5·18 조사위원 못 바꾼다”

‘5·18 망언’ 한국당 비난 쇄도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의 파문을 ‘당내 징계’를 명분으로 회피하려는 꼼수를 내놓는가 하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재추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당헌·당규를 방패삼아 망언 의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조사위원 재추천을 외면한다면 오는 4월 재보선 등을 앞두고 촛불 민심의 재결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모독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의원들의 제명 문제와 관련,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5·18 민주화운동 모독 논란과 관련해 이종명 의원에 ‘제명’ 징계를 내렸고 전당대회 대표 및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의 제명 조치는 의원총회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 아직 확정된 사안인 아니다. 또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징계

나경원 “5·18 정치적 이용 유감”

위원추천 거부 5·18규명 뭉개기

“한국당 극우세력 단절 못하면

전 국민적 해체 요구 직면할 것”

를 받을 것인지도 미지수다. 특히, 두 사람이 전대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 징계 자체가 무산되거나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늬만 징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5·18 진상규명도 기약없이 표류할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추천한 후보들은 위원 자격뿐 아니라 진상조사의 대상 범위에도 아주 적절하다”며 “헬기 기총소사 부분도 진상조사 범위이기 때문에 군 출신 경력자나 법조인 출신, 고증 작업을 한 언론인 출신도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당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법적 자격 요건 여부를) 청와대가 다시 검토하기를 요청한다”고 공을 청와대에 넘겼다.

이같은 한국당의 입장에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엄지도 없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한국당의 비협조 등으로 진상조사위가 5개월째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야당 추천 조사위원 4명 가운데 3명을 가져간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추천 대상자로 검토하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 1월에서야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녹장 추천’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역사 왜곡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들 가운데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는 자격요건 미달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5·18 망언 사태 등을 지역적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망언 의원들에 대해 당내 징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극기 부대 등 극우세력에 휘둘리며 최소한의 상식을 짓밟는 자유한국당의 퇴행적 모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상으로 돌아갔던 촛불 민심의 재결집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파동은 지난 촛불 혁명 이후,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이슈라는 점에서 쉽게 잠잠해질 사안인 아니다”라며 “한국당 지도부가 이번 파동을 계기로 극우 세력과의 과감한 단절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만원 주장은 허위 날조”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지만원 씨의 5·18 관련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임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 의원 ‘온라인 5·18 가짜뉴스 차단법’ 발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5·18 가짜뉴스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시작된 곳은 대부분 지만원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였다. 주로 5·18과 북한을 연관 짓거나 5·18 유공자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도표 등을 함께 첨부해 지씨가 올린 글 등은 그대로 개인 블로그나 개인 방송으로 옮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진과 자막이 입혀진 자극적인 동영상으로 재편집되기도 했다.

민언련 관계자는 “근거가 전무한 편향일탈적인 주장이 무제한 복제·유포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다시 카카오톡 등 개인의 SNS로 공유하면서 왜곡된 정보가 그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런데도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왜곡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비방·왜곡·날조 정보’를 포함했다. 이 경우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다.

천 의원은 “5·18 왜곡·날조 정보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18 관련 허위·비방·왜곡·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이어 “5·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권영진 대구시장 “5·18 망언 대신 사과 드립니다”

이용섭 시장에 사과·위로 메시지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과 관련 같은 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대신 사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5·18 왜곡 시도와 망언 속에 오랜 기간 ‘달빛동맹’을 맺고 교류해온 광주와 대구가 공동 대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권 시장은 “5·18 망언에 대해 이용섭 시장에게 사과와 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16일 이 시장에게 “저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시장으로서 시장님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구시민들 다수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한 언론사 여론 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57.6%가 해당 국회의원들의 제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 광주와 대구가 맺은 달빛동맹이 위축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17일 “시장님의 진정성과 대구시민들의 깊은 형제애가 더욱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간 대구와 광주시민들이 함께 일군 연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강한 연대가 왜곡된 역사를 정의 위에 바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고 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 대통령 “권력기관의 일제 그림자 벗는 원년 돼야”

국정원·검·경 개혁 의지 재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직접 죄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3대 권력기관을 책임지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참여시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해 안에 개혁 과제 완수를 마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국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정법, 검·경 수사권 관련법 등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국정원법 등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개혁 입법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등록금은 잠이 아니라
힘이 되어야 하기에

신청하자, 국가장학금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중위소득 120% → 130%
대학생 3명 중 1명 수혜 예상

대학생 본인 소득 공제액 상향
소득 구간 산정 시 공제액
100만원 → 130만원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신청 절차 개선
학생 개별 신청 → 대학 대표 신청

신청대상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 재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 시 심사 후 지원 가능 (재학증 1회에 한함)

신청기간
신청기간 '19.1.29.(화) ~ 3.6.(수) 18시
※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19.1.29.(화) ~ 3.8.(금) 18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앱을 검색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1599-2000

교육부 **한국장학재단**